



데스크  
칼럼 \_

## 닭고기 업계가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은 무엇인가?

본지 김한웅 부장

**병술년** 한해가 연초부터 조용하  
지는 않을 전망이다. 어  
렵게 첫발을 내딛은 육계 자조금사업의 출  
발에서부터 종계의 과잉입식, 아세안·미국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올 한해도 계육업계로서는 많은 난제를 풀  
어나가야 하는 형국이다.

모든 문제는 순리대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원칙에 입각해있으면서도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 작금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옛 고사성어 중에 화호유구(畫虎類狗)란  
사자성어가 있다. “범을 그리려다 실패하여  
개를 그린다”는 풀이로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해도 중간에 흐지부지하면 아니  
한 만 못하고 오히려 웃음거리가 된다’는 뜻  
이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육계 자조금사업이  
꼭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육계 자조금사업은 국내 육계산업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

들고자 시작하는 사업이다. 우루과이 라운드니, GATT 협정이니 하는 과정에서 농업분야에 대한 직접지원이 허용되지 않는 상황에서 간접 지원을 통해 농가, 나아가서는 국내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이다.

이 또한 무한정 정부당국의 지원이 보장되는 사업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육계자조금 사업의 진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토대로 국내 육계산업이 정상에 올라야 하는 중요한 사업이기도 하다.

이미 국내 육류소비시장은 일정궤도에 올라 있다. 과거에는 단백질 공급량이 부족하여 빠른 속도로 소비량이 증가하는 등 지금까지는 육류의 소비를 늘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확보된 소비시장에서 돼지고기, 쇠고기와 경쟁을 하며 닭고기 소비시장(단백질 공급시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시대에 돌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 육류에 비해 닭고기의 우수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홍보사업을 지속해야 하는 것이다.

더욱이 돼지고기, 한우 업계가 이미 의무자조금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규모 또한 육계와는 큰 차이가 있다. 육계 자조금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만큼 국내 닭고기 산업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미 양돈의 경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조금이 조성된 후 소비촉진 홍보를 통해 소비가 안 돼 양돈업계에 부담으로 작용해왔던 돼지고기

의 전지, 후지가 웰빙식품으로 변신해 품귀현상이 발생하는 등 홍보의 기능은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을 보아왔다.

따라서 육계 자조금사업은 사업 그 자체만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이를 빌미로 각자의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또 다른 당사자의 저항감을 불러오게 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다는 판단이다.

혼란을 가중시키기보다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 정지작업을 통해 육계 자조금사업이 어떠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각자에게 바람직한지 검토작업을 가져야 한다.

어느 정도의 거출금이 적당한지, 물론 법의 취지는 최소의 금액을 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산업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규모의 금액을 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계열화사업이라는 육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열주체와 농가의 거출비율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도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선 해결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이미 한차례 유회된 대의원총회를 다시 소집한다해도 어떠한 성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전망이다.

충분한 협의를 거쳐 육계, 나아가서는 닭고기 업계가 살아나갈 수 있는 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는 것만이 우리업계가 살아나갈 수 있는 방안이다. 